

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과 그 전후 맥락

18th Centurys Political Thoughts of Joseon Dynasty seen in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Before and After

저자 (Authors)	오수창 Oh Soo-Chang
출처 (Source)	역사학보 213 , 2012.3, 25-48(24 pages) The Korean Historical Review 213 , 2012.3, 25-48(24 pages)
발행처 (Publisher)	역사학회 THE KOREAN HISTORICAL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73939
APA Style	오수창 (2012). 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과 그 전후 맥락. 역사학보, 213, 25-48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4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과 그 전후 맥락*

오 수 창**

- | | |
|-----------------------------|-----------------------|
| I. 머리말 | 한계 |
| II. 17세기 지배층 공동의 정치논리와 그 좌초 | IV. 19세기 민과 국가의 직접 대면 |
| III. 18세기 절대적 군주권의 개혁논리와 | V. 맺음말 |

I. 머리말

이 논문은 18세기 조선의 정치를 이끌어가던 논리를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거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치사상은 매우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인간과 세계의 본질과 연관된 것일수록 쉽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사상의 인간관이나 세계관 등 근원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18세기 정치의 특징과 성격을 규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구체적인 정치 운영에 대한 생각과 논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18세기 탕평정치는 19세기 정치의 전제가 되는 동시에 17세기에 한 전횡이 성립되었던 봉당정치와 그 변모라는 역사적 상황을 이어받으면서 나타났다. 18세기 정치의 논리와 질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선중기에 정립된 봉당정치의 논리로부터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한다. 한편 19세기 정치사는 세도정치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그것은 정치를 지배층 중심으로만 파악하는 구도였다.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임 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18세기 탕평정치를 거치면서 정치의 핵심 구도가 지배층에 한정되는 상황을 벗어나게 되었다면 19세기의 정치사를 설명하는 관점도 세도정치론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이 조선후기 정치사의 구체적인 실상 이해에 중심을 두기보다, 앞 뒤 시기, 특히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전근대 정치체제의 붕괴·극복 및 근대와의 연결 가능성에 유의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정치사의 부분, 혹은 전체에 대한 전면적 부정, 전면적 긍정을 극복하고 실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정치가의 표방이나 직접적으로 수행한 정책보다는 그 기반이 된 정치의 내적 논리에 집중하려는 것이다. 또한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새로운 자료와 기층민의 동향에 대한 정치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II. 17세기 士族 공동의 정치논리와 그 좌초

1. 조선중기의 朋黨政治와 그 논리

17세기의 붕당정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 급격히 확대되어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으로는 정치권력을 향한 경쟁이 조직될 수 없게 됨에 따라 집단적으로 결집된 상태에서 그 경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된다(오수창 1998, 92). 17세기 전반 인조반정을 계기로 정부 관리의 인사와 정치에 西人과 南人이 공존하는 질서가 적용되었으며, 붕당을 단위로 한 정치적 경쟁이 지속되었다. 조선의 정치인들은 처음에는 君子들끼리 眞朋을 이루어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歐陽脩와 朱熹의 붕당론을 이끌어 자신들의 붕당을 합리화하였으나 차츰 조선의 실제 붕당의 성격을 이해한 위에서 자신들 나름의 붕당 이론을 세우게 되었다. 그 핵심은 당대 조선의 붕당이 君子 또는 小人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붕당 사이의 의견이 다른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복수 붕당의 공존과 상호 비판의 논리가 추출되었다. 이러한 논리를 실제 정치에 구현하기 위한 제도와 관습이 마련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정치 쟁점의 토론을 본령으로 하는 사헌부·사간원의 논

의에 전형적으로 적용되던 避嫌-處置之 제도였다. 그 두 기관의 언관들 사이의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논의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다를 경우 방어적 입장에 놓인 인물들이 사직을 하였다. 이때 사직은 그대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명목에 그칠 따름이었으며, 사헌부·사간원 중 상대편 관서 혹은 홍문관의 관인 등 제3자가 피험한 인물들의 동기나 절차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국왕에게 出仕 혹은 관직 교체(遞差)를 건의하는 처치를 수행하였다. 국왕은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신하들의 처치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피험을 하였다가 정당성을 인정받아 국왕에 의해 출사의 명령을 받은 경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더욱 철저히 논의에 참가할 수 있었으므로 소수 의견을 주장할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거듭된 피험이나 논의 상대방의 피험, 다른 기관의 처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험 등으로 빚어지는 상당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수정하려는 시도들은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론에 부딪혀 별다른 변화를 빚어낼 수 없었다. 17세기 봉당정치를 이끌어간 논리는 이렇게 정치인 각자의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그에 앞서 사족의 공통 기반에도 충실하였다. 인조 연간의 서인과 남인은 인조의 생부 정원군을 국왕인 元宗으로 추숭하게 되는 전후 13년에 걸친 대논쟁과, 국가의 존망을 둘러싼 對後金(淸) 정책에서 봉당에 따른 견해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의 정치에 참여한 세력이 성리학 정치사상을 기반으로 복수 봉당의 현실과 구체적 정치 제도에 대한 굳은 합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¹⁾

2. 조선 朋黨論의 내적 모순

위와 같은 봉당정치의 논리와 제도가 복수 봉당들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체제를 영구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립하는 봉당을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세 가지의 이론이 있었다고 설명되었다. ①

1) 이상 인조대의 정치 질서와 제도에 대해서 오수창(1985) 참조; 歐陽脩와 朱熹의 봉당론과 그것이 조선 정치에 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태진(1977, 44~46) 참조.

調劑論 ② 君子小人 · 是非明辨論 ③ 調停論이 그것이다. 먼저 調劑論은 봉당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봉당의 범주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거부하여 兩是兩非說의 입장을 취한다. 정치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해 봉당을 기반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개인별로 선악을 따져 등용하자는 調劑收用論을 인사에 적용한다. 율곡 이이가 말한 대로 동인 · 서인의 봉당을 타파하여 사류의 보합을 이루어야 한다[打破東西 · 保合士類]는 주장이 이러한 논리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것은 봉당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현실에서는 복수 봉당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이 되었다. 봉당이라는 관점에서 정치가를 평가하지 않고 봉당을 인위적으로 타파하려는 노력 역시 부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봉당이 정치 주체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君子小人 · 是非明辨論은 구양수와 주희의 봉당론을 조선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즉 봉당에는 君子黨과 小人黨이 존재하므로 봉당간의 시비를 명확히 가려 소인당을 축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을 하는 이들은 자기 당이 군자당이라고 자처하면서 봉당의 의미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세우게 마련이었다. 세 번째 調停論은 현실적으로 봉당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봉당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군주를 비롯한 당국자들은 그 봉당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하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강한 봉당을 억누르고 약한 자들을 지탱해주어야 한다[抑強扶弱]는 논리로 봉당들 사이의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논리였다.²⁾

하지만 조선의 봉당에 대한 이 세 방향의 논리들이 조선 봉당의 존재와 그에 의한 정치를 근본적으로 정당화하고 논리화하지는 못하였다. 調劑論은 현실적으로 봉당정치를 수행해나가는 적극적인 논리를 마련하였지만, 논리의 출발점은 역시 봉당의 소멸을 목표로 한다는 데 있었다. 君子 · 小人에 의한 봉당론은 봉당의 존재의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이론이다. 하지만 군자당과 맞서는 봉당은 소인

2) 이상 세 갈래 조선 봉당론에 대해서는 鄭萬祚(1992, 128~141) 참조.

의 무리가 되게 마련이므로 ‘복수 봉당에 의한 정치’의 논리가 되기는커녕 상대당을 인정할 수도 없는 논리였다. 調停論은 현실적으로 봉당의 존재를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논리였지만 그 출발은 봉당을 ‘邪黨의, 亡國의 존재’로 단정하면서 극렬히 비판하는 것이었다. 근본 목적은 破朋黨에 있었던 것이다. 17세기 봉당정치 질서가 이룩한 정치 발전은 명확하지만, 그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정치를 높은 수준에서 정당화, 논리화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오수창 1982, 367~370).

17세기의 봉당정치는 운영장치에도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조선의 정치체제상 최정점에 자리잡은 국왕의 입지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중기 봉당정치의 논리와 작동 원리가 국왕의 권위와 권력을 전제로 한 군주정 안에서의 하위 질서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당시 정치의 최고 권력자를 논외로 한 정치 질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였다. 또한 봉당의 공존에 대한 공통기반이 유지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봉당 사이에 경쟁이 격화되어 갈 때 봉당 자체적으로든 국왕 등 제3자에 의해서든 그 경쟁을 조절할 논리나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17세기 후반 들어 禮訟의 격화, 중앙 정치를 주도하는 봉당이 국왕을 축으로 일거에 바뀌는 換局의 발생과 함께 봉당 정치의 존립 자체가 부정되는 현실로 이어졌다.

3. 朋黨의 새 논리 모색과 그 실패

17세기에 정립되었던 봉당정치가 한계를 노정하고 정부 관인들 사이에서 봉당에 기초한 격렬한 대립이 터져 나옴에 따라 당대의 정치사상가들은 그것을 극복하는 논리를 창출해야만 했다. 그러한 문제에 정면으로 대결하고자 한 것이 李瀾의 『藿憂錄』에 실린 「朋黨論」이다. 앞에서 소개한 봉당에 대한 세 가지 논리나 군주 중심의 전통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서, 당대의 봉당정치가 지닌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치를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는 새 활로를 모색한 인물은 이익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군주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항상 있었지만 그것

은 봉당 현실에 대한 논리적인 성찰이나 타개책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관념을 재수립하려는 것이었다.

이익의 봉당론은 봉당과 정치적 대립의 본질에 대한 통찰에서 출발하였다. 그가 주장한 “朋黨은 싸움에서 생기고, 그 싸움은利害에서 생긴다. 이해가 절실할수록 黨派는 심해지고, 이해가 오래될수록 당파는 굳어진다”는 분석은 그때까지 정치인들이 중세적인 명분론이나 선악·시비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정치를 설명하던 것과 달리, 봉당 사이의 대립이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싼 ‘세력 경쟁’임을 간파한 탁견이었다. 대부분의 정치가가 17세기 후반 이후 시대가 내려올수록 더욱더 ‘君子小人論’이나 ‘옳고 그름[是非]’을 따지는 원론에 사로잡혀 봉당정치의 변화와 정치인들 사이의 대립의 격화를 논리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던 상황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분석이다. 이익은 또 정치 참여자가 확대되던 시대적 맥락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取人은 오로지 科擧로만 한다. 처음에는 그 수가 역시 적었으나, 宣祖代 이래로 점차 많아지더니, 오늘날에는 극에 이르렀다.……世閥의 집안과 文墨의 집안에 빈궁하게 살면서 紅牌을 안고서 차탄하는 자가 셀 수조차 없이 많다. 그러하니 黨이 어찌 갈라지지 않겠는가?” 하였다. 그는 이러한 인식 위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인원을 줄여 봉당을 없애고자 하였다. 즉 “우선 과거를 간소화하고 雜進을 막고 考課를 분명히 하며, 어리석고 둔한 자를 제거해야만 관리질하려는 자가 적어질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³⁾

봉당이 각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선 봉당의 역사적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익은 유감스럽게도 봉당 대립의 해결 방안을, 정치에 참여하는 인원을 줄이고 경쟁을 없애는 쪽으로 제시하면서 방향을 거꾸로 잡았다. 일단 확대된 정치세력을 줄이는 것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한 가능한 일이 아니었으며, 봉당을 통

3) “朋黨生於爭鬭 爭鬭生於利害 利害切 其黨深 利害久 其黨固 勢使然也……我國取人 尤專科擧 然始也其數亦少 宣廟以來 漸見增多 至今日極矣……世閥之門 文墨之戶 蟬腹龜腸 撫紅牌而嗟恨者 不可勝記 黨安得不分哉……然則如之何其可也 簡科擧防雜進也 明考課汰茸闥也 然後惜名宦毋多與也 愼陞超母輕擢也 務稱材毋數遷也 使利竇塞而民志定也 如是而已矣 不然雖殺之不禁”(『藁憂錄』「朋黨論」).

한 정치인들의 결집은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또한 바람직한 일도 아니었다. 사회구성원 중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 발전의 한 측면이었기 때문이다. 이익과 그 시대인들이 수행해야 했던 과제는 봉당의 타파와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세력의 결집과 경쟁을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론을 세우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것과 함께 복수 봉당에 의한 정치운영에서 국왕의 위상과 역할을 논리화하고 봉당과 국왕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李瀾은 정치적 경쟁과 대립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꿰뚫어보는 성과를 올렸음에도 정치 참여자의 수를 줄여 봉당 대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복고적 대책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의 정치 이론은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확대된 정치 참여층을 중앙 정치로 포섭해 낸 앞시기 봉당정치의 성과마저 부정한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16세기 이래 관인들을 중심으로 한 士族 공동의 정치논리가 봉당정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시행함으로써 한 시대의 성과를 올린 끝에,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고 결국 좌초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III. 18세기 절대적 군주권의 개혁논리와 한계

1. 蕩平政治의 지향점

18세기의 정치와 국가 운영 논리는 英祖와 正祖를 중심으로 한 蕩平論에 그 특징이 있었다. 18세기의 군주와 정치지도자들은 탕평정치를 통해 다각적인 국정 개혁 노력을 기울였고 새로운 국가 운영 논리를 제시하였다. 왕과 사대부 중심의 민본 이념이 18세기에 왕과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정치의식으로 발전하였고 그것이 민주주의 수용의 기반이 되었다는 주장은 탕평책에 대한 적극적 평가를 대표한다(이태진 2011, 19~20). 그간 연구에서 탕평군주가 감행한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들도 많이 밝혀졌다. 특히 지식인들에게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주었고 그 지식인들로 하여금 괄목할 업적을 남기게 한 것을 큰 성과로 꼽기도 한다(박광용 1998, 331).

지방에 대한 정책을 예로 든다면, 영조·정조는 함경도·평안도 등 서북 지역에 대해서 앞 시기와 전혀 다른 정책을 폈다. 종래 사족 관인들이 주도하던 지방정책은 그 지역에 性理學을 뿌리내리게 하여 당시 서울이나 삼남과 같은 사회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조·정조는 그 지역에 대한 학문 보급 노력을 억제하면서 상업과 무예를 진흥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서울이나 삼남을 배경으로 한 士族의 사회 질서와 구분되는 그 지역의 개성을 존중하고 평안도의 경제적 활력을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그 지역의 사회 역량이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현실적인 의미 이상으로, 탕평 군주들이 중세적 보편성으로부터 벗어나 개성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었다(오수창 2002, 82~91; 99~108).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근대 이행의 추동력을 지니는 것이었는가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정조의 개혁 방안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것을 꼽는다면 그동안 집중 조명된 노비제 혁파의 구상을 들 수 있다(李泰鎮 1993, 78~82; 김성운 1997, 226~241). 그런데 이러한 구상은 실제 정책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대를 가를 만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노비제는 구체적인 실상이 어떠했던 존재만으로도 조선후기 또는 18세기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폐지되었을 경우 개혁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해소하는 의미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근대를 향한 노정에서 선도력을 크게 발휘할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탕평 군주, 특히 정조가 시민세력의 출현을 기대하였고 절대군주와 시민층의 결합에 의한 개혁을 시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⁴⁾ 근대지향적 개혁을 통해서 성장하는 계층이 확인되지 않으며, 절대군주제 개혁이 성공할 수 없었다는 평가가 사실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박광용

4) 대표적으로 김용흠(2006, 198).

1998, 330; 金駿錫 2005, 213~214).

영조·정조는 현실 정치에서 위와 같은 정책을 펴는 것과 짝하여 군주의 초월적 권위를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정조의 정치사상은 君主道統說에 중점을 두고 군주의 전제권이 주자학의 道統의 지위를 압도하는 초월적 존재임을 천명하였다고 설명되었다(김용흠 2006, 200). 또 정조가 지은 「萬川明月主人翁自序」의 군주론이 ‘聖君專制主義論’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즉 군주 자신의 치열한 修己의 노력을 통해 모든 利慾에서 벗어나 맑은 심성,至善한 경지를 획득한 상태에서 행사되는 군주의 절대권이라는 것이다(李泰鎮 1992, 241; 266).

탕평 군주가 절대적인 군주권을 정립하고자 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그것이 전후 시대와의 맥락 속에서 지나는 의미는 선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영조가 君師로 출현함으로써 정치의 주도권이 사대부에서 국왕으로 전이되었고 탕평은 조선조 유학정치의 새로운 단계였다는 평가에서도, 국왕권이 사대부와 결정적으로 분리된 지점은 명쾌하지 설명되지 않았다(이경구 2004, 32~33; 43). 정조가 자신의 제왕학을 토대로 삼대의 이상적 군주상인 君師를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며 개혁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서 성과를 거두었음이 설명되었다(김문식 2007, 6; 455~463).⁵⁾ 하지만 그가 거둔 ‘상당한 성과’와 한계가 시대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찾을 수 없다.

2. 절대적 군주권의 의미

조선시대 정치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영조·정조에 의해 추구된 군주의 절대권은 앞시기에 정립되고 발전되어 온 정치이념의 후퇴를 뜻하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조선초기 성리학적 정치 이념의 확립은 君臣倫理에 ‘義’ 윤리가 수립된 것이 그 핵심이었다고 설명되었다. 고려시대 군신 관계의 중심을 이루는 ‘恩’ 윤리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윤리였다면 조선초기에 성립된 ‘義’ 윤리는 군주의 현실 권위를

5) 영조와 정조의 君師 이념에 대해서는 윤정(2007) 등 참조.

넘어서는 君臣 공통의 가치를 설정했다는 것이다(金勳埴 1997). 사림정치의 이론적 기반이 된 君主聖學論 역시 혈통과 세습에 의해 국왕의 절대권과 전제권을 확보하려는 君父論에 비해 국왕의 권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한 정치 이론이라고 설명된다(한상권 2011, 166). 조선 왕조의 정치가 이룩한 제도적 · 정책적 성과는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그에 비해 탕평 군주가 지향한 군주의 절대 권력은 군신간에 공동으로 따라야 할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정조에 의하면 군신의 의리는 군주의 자질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임금의 무례하더라도 신하가 불충할 수 없다는 것은 남편이 어질지 못하더라도 여자가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와 결합하였다(윤정 2005, 264~266). 이것은 조선초기 이래 군신 공통의 가치를 설정하여 발전시켜 온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근래 조명된 正祖 어찰첩의 비속어 사용에서도 확인된다. 정조는 순정한 고문체를 구현하기 위한 문체반정을 추진하였지만 자신은 오히려 그러한 정책에 구애되지 않았다. 정조가 지향한 군주의 절대권이 거듭 확인된다. 18세기 후반 정조의 정책은 논리적 문제점 외에 현실적으로도 명백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그는 관인과 사족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높은 권위를 자랑하고 있던 安東金門에서 金祖淳을 발탁하여 세자를 위탁하였고 그것은 결국 19세기 勢道家門 권세가들이 국왕을 압도하게 되는 단초를 열었다. 영속적인 군주 절대권의 수립에 실패한 것이다(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 정치사 연구반 1990, 585; 김인걸 2011, 130~132). 사실 탕평정치의 의미를 가장 강조하는 연구에서조차 탕평의 전제가 聖學으로 무장된 明哲한 聖人 군주였으며, 탕평정치는 약 1세기 간의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세도정치로 바뀌었다고 설명되었다(김백철 2011a, 49~50). 정조가 지향한 정치는 군주가 높은 도덕성을 자기 기준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하였다(한상권 2011, 169). 그런 만큼 탕평정치는 정치 체제나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립된 것이었다고 보기 힘들며, 영조나 정조의 정책은 후대로 계승 · 발전되기가 매우 어려운 정치질서를 지향하였다.

지금까지 18세기 국왕과 사족들의 정치와 정치사상에 대하여 근대를 향해 나아가던 진보성을 강조하는 많은 연구들이 산출되었지만 결정적인 설득력을 지닌 것은 찾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民國’ 개념을 추적하면서 그 시기에 ‘군주=백성=국가’의 관계설정이 이루어졌다고 한 연구가 영조대 정치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평가한 것일 것이다(김백철 2010, 276~277). 그 시기 ‘민국’ 개념의 빈번한 사용이 정치사상의 진전을 뜻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구에서 강조된 ‘군주=백성=국가’의 등치 관계는 논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민국 개념으로 대표되는 영조대의 정치사상이 조선초기 이래의 민본주의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것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같은 연구자의 최근 저술에서 ‘민국’이 국가 자체를 나타내는 용어와 등치되었다고 한 주장 역시 실증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김백철 2011b, 118).⁶⁾ 영조대에 흔히 발견되는 民國은 백성의 삶과 국가의 살림살이 정도의 의미였으며, 국정운영의 대상을 뜻했을 뿐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김인걸 2011, 120~123). 민국과 국가의 등치 관계를 가리킨 것이라고 제시된 위 자료에 대해서도 이 설명이 더욱 잘 들어맞는다. 정조의 탕평 정치에서도 ‘국왕=국가’의 관계가 강조되었다. 하지만 『명외록』 곳곳에서 儲君 혹은 국왕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로 표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관계가 논증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정조가 국왕인 자신을 표현할 때 국가 혹은 國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는 설명 역시 명확한 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최성환 2009, 107).

탕평정치의 의의는 ‘국왕에 의한 권력적 · 이념적 통일을 바탕으로 국가 권력의 효율성과 國富의 증대, 사회 성원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한 것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그 중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논의로는 吳光運이 군현 관리의 선발을 신분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시행하지 않았다는 데서 출발하여 治化의 주체를 백성 일반

6)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12월 8일의 기사가 전거로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은 왕세자가 聽政의 명령을 받들 수 없다는 상소를 올리면서 “況茲民國之重, 機務之繁, 遽以畀之 不少留難, 何哉”라 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機務’와 병렬된 ‘民國’을 들어 그것이 국가 자체를 나타내는 용어와 등치되었다는 결론을 끌어낸 것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으로 확대하였으며 나아가 개인은 사회 전체를 위하고 전체 사회는 개인을 위해서는 사회를 추구하였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것은 당시 정치이념의 선진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논리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탕평정치의 중심 논객인 오광운이 신분제의 원리를 벗어나려 했다는 설명은, 조선의 주현제도가 봉건제의 유체이지만 그 통치자의 선발에서 세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진술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설득력을 지니기 힘들다(김성윤 1997, 88~92).⁷⁾ 같은 연구에서 탕평정치를 전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은 그 시대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정조는 서구 근대화 과정의 계몽전제 군주에 비견되기도 하였다. 상업 자본주의의 발달을 배경으로 했고, 지적 탐구를 정치적 절대권 행사의 근거로 삼고자 하였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녔다는 것이다. 단, 계몽절대주의가 공화제로 나아가는 가교역할을 한 역사적 공을 세운 데 비해, 정조의 노력은 사후 정치적 적대세력의 작위적인 파괴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李泰鎮 1993). 이것은 이후 고종에게서 정조의 유산을 기반으로 한 조선 왕조의 근대 개혁 노력을 추출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조선의 탕평군주와 서구 계몽전제 군주 사이에 동일한 배경으로 설정된 상업 자본주의의 성립과 그 성격, 학문 탐구와 법치 추구의 공통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요소들이 과연 양측 군주들이 놓여 있는 역사적 상황의 본질에 해당할 것인가 하는 것 등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 군주의 학문 탐구를 통해 君師論이 성립되었지만 그것이 지닌 역사적 의미가 명확히 제시된 바 없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나아가 서구의 계몽전제군주들은 근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회 계약'과 같은 핵심 개념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프레데리크 들르슈 편, 윤승준 역, 1995, 298). 서구의 계몽전제군주는 원리상 군주가 신민의 이익을 더 잘 알고 있으므로 신민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었으며, 대표적인 계몽군주인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2세마저

7) “曰 吾所謂州縣者 亦封建之遺制也 特擇賢而授之 不得私其子孫也”(『藥山漫稿』권15 「雜著」 「史評」 下).

도 실제로 계몽주의적 개혁을 추진할 역량 또는 의지가 없었다고 설명된다.⁸⁾ 계몽 전제군주는 본질적으로 반민주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되기도 한다.⁹⁾ 따라서 설령 정조가 서구의 계몽전제군주에 비견된다 하더라도 근대를 향한 탕평군주의 역사적 의미를 확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근대 연구에서 18세기 탕평정치가 이룩한 성과로서 소통과 타협의 면모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18세기 탕평론 · 탕평책이 한국 중세정치의 원리와 방법이 근대의 그것으로 이행해가는 단초를 열었다고 하면서, 그 탕평론과 탕평책이 한국정치사에서 타협과 화해의 전통을 세우며 새로운 시민사회로 진전하기 위한 역사적 경험이 되었다는 평가가 대표적이다(김준석 1997, 290).¹⁰⁾ 하지만 조선 사회에서 근대로의 지향이 타협과 화해의 노력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현실적으로는 갈등의 대폭발 쪽이 훨씬 가능성이 컸으며, 그것을 직접 추동하는 논리가 마련될 수 없다면 갈등의 강제적, 제도적 조정이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사상이어야 진실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탕평정치에서 정치세력이 아닌 사회 전반의 갈등에 근본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하는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듯하다.

18세기의 정치를 결론짓는 정조의 사상이, 주자학을 현실적인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진전을 보였지만, 주자학적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서지 못하고 새로운 사상적 탐구나 성찰의 의미를 갖기보다 정치기술 혹은 정치전략이라는 현실의 요구에 복무하면서 전통적 가치를 공고화하였다는 평가가 있었다(백민정 2010, 464~465). 이것이 전후 맥락에 충실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탕평정치의 현실적 성과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연구에서도 탕평군주론이 사상적으로 주자학 의리를 온존시키는 명백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하였는데(김용흠 2006), 주자학의

8) Wikipedia, "Enlightened absolutism", http://en.wikipedia.org/wiki/Enlightened_despotism (검색일: 2012년 3월 11일).

9) 네이버 백과사전, "계몽전제군주" <http://100.naver.com/100.nhn?docid=11831> (검색일: 2012년 3월 11일).

10) 이밖에 김성윤(1997, 결론: 331) 등 참조.

리론을 온존시키면서 조선시대 정치사상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정조의 국가 운영에 나타나는 한계를, 각도를 달리하여 그가 華城을 쌓으면서 화려하게 설치한 봉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찍이 조선이 크고 작은 전란을 겪어오면서 봉수가 성공적으로 작동한 예를 확인할 수 없다. 조선 봉수의 전달 거리나 작동 체계가 정확한 정보를 수도까지 전달하고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조는 화성에서 봉돈을 포기하지 못하였다.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자의 기강을 엄정히 하면 무엇보다도 빨리 변방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이상을 폐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조의 큰 업적으로 평가되는 화성의 시대적 의미에 대해서도, 그것이 조선후기 백여 년간의 진경문화를 마무리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지만, 밖으로부터의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새로운 문화가 태동하면서 그들의 꿈과 의도가 뒷시기까지 그냥 그대로 계승될 수는 없었던 것이 당시 조선의 역사가 맞았던 운명이었으며, 조선사회의 중흥과 정조대 문화의 전성이나아가던 방향이자 역사적 귀결이었다는 평가가 적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유봉학 1996, 3).

지금까지의 18세기 정치사 연구는 국왕권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기보다는 국왕권의 안정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신하들 공동의 정치 운영 논리가 벽에 부딪친 상태에서 군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논리를 세우려 한 것은 불가피한 노력이었고 현실정치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정치의 근본적 과제는 국왕권의 안정에 있었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군주 지배체제를 극복할 전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전근대 정치체제의 핵심인 국왕이 실질적인 중심이 되어 그 시기 정치 모순, 사회 모순의 핵심을 해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왕권을 뒷받침할 새로운 사회세력이 명확하지 않던 조선후기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개혁 지향의 강력한 군주'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군주가 개혁의 충분 조건이었던 것처럼 상정하는 데는 찬동하기 힘들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영조나 정조와 같은 능력을 갖춘 국왕이

계속 배출될 수는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정조의 개혁정치가 오히려 조선왕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에 이르렀다(박현모 2001, 10~11). 대단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전개되었을 한 시대의 마감 을 하나의 정치 상황에 단선적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찬성할 수 없으나, 영조와 정조, 특히 정조에 대한 평가는 ‘해체기적 혼란의 수습자’ ‘질서의 재확립을 위한 기존 유학의 새로운 해석(李泰鎮 1992, 268)’¹¹⁾에서 그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탕평정치론의 좌절이 지나는 시대적 의미는 성호 이익의 봉당론을 끝으로 신하 들 공동의 정치논리가 좌초한 데 이어 국왕까지 포함하는 조선시대 지배층 전체의 정치 논리가 그 사명을 다한 끝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좌초하였음을 뜻한다.

IV. 19세기 민과 국가의 직접 대면

1. 근대 전망의 정치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후기 지배층의 정치 논리였던 朋黨論과 君主論은 18 세기를 지나면서 과열되었다. 정치세력 중에서 南人이 다른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군주의 전통적 권위와 권력에 의지함 으로서 색다른 활로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 정치사 연구반 1990, 590~591), 中人 또한 기성 지배 체제에 편입을 시도하는 데서 더 나 아가지 못한 채 조만간 체제 전체를 덮칠 위기 상황에 둔감한 상태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19세기 지배층의 정치논리는 18세기로부터 별다른 활로를 찾지 못한 채 앞 시기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었다. 과거에 18세기 蕩平政治와 19세기 勢道政治의 관 계를 급격한 단절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때도 있었으나 19세기 세도정치는 운영 주 체, 정치 구조와 운영 등의 모든 면에서 봉당정치-한국-탕평정치로 이어지는 조선후

11) 이 구절이 실린 논문의 강조점은 군주 正祖의 개혁성에 있으나, 인용 구절이 당시 정치의 핵 심을 더 잘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 정치사의 계기적 귀결이라는 사실이 오래 전에 설명되었다(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 정치사 연구반 1990, 762~766; 오수창 1991, 138~139; 149~150).

지배층의 정치론이 좌초한 가운데 탕평정치 후 정치사의 핵심 주제는 큰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다. 19세기의 정치는 세도정치가 그 본령인 것처럼 이해되기도 하지만 세도정치를 통해 그 시대 정치의 시대적 의미에 접근할 수는 없다. 이제 정치사 탐구의 주된 과제는 국왕이든 봉당이든 그 논리가 좌초된 지배층 중심의 설명에서 벗어나, 민 일반의 정치적 인식과 동향에 대한 접근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17세기 이후 봉당-국왕-민으로 이어지는 정치사 설명틀을 세우는 데 대해서는 논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런 틀에서는 19세기 '정치사의 실종' 상황이 빚어진다고 비판하면서 公論, 輿論과 그 주도층을 포함한 19세기 정치사 설명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김인걸 2002, 348~350). 공론·여론을 통해 조선시대의 정치를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19세기는 전근대와 근대라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시대를 가르는 변화의 시점이었으며 앞뒤 시기의 정치사, 특히 정치세력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단층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더 앞선 시기의 정치를 설명하는 데 민의 의식과 동향을 대입하던 노력들(鄭奭鍾 1983)은 너무 성급하고 현실과 괴리된 것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이제야 말로 민의 의식과 동향이 정치사의 주된 주제가 될 시기가 된 것이다. 공론·여론은 정치운영론 중의 하나로서 당연히 그러한 틀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사 탐구의 자료에 대해서는, 민의 사회 의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자료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野談·小說과 같은 문학 자료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민의 정치의식: 官權과의 대립

조선후기 야담·소설에서 남녀간의 애정과 같은 보편적인 것을 제외하고 시대성·역사성을 담고 있는 핵심 주제는 민 일반과 官權의 대립이었다. 『춘향전』에 나타난 春香의 저항도 국가 권력에 대한 것이었다. 이른 시기의 『晚華本 春香傳』

(영조 30)의 수령 비판도 그렇거니와,¹²⁾ 『남원고사』 (19세기 중반)의 갈등 역시 불법적 관권과 백성 사이에 있었다. 즉 ① 기생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변부사의 주장은 『속대전』 규정과 같이 그 자체로서 불법이며 ② 따라서 춘향에 대한 수령의 겁박은 제도적 신분의 문제가 아닌 불법 행위라는 점에 초점이 있었다. ③ ‘좌우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이 가슴이 타는 듯 모두 눈물을 머금고 대신 맞으려고 다투어 들어가려’ 하던 상황은 불법적 관권과 백성 사이의 대결을 정면으로 드러냈으며(임형택 1987, 127~128) ④ 그에 비해 춘향이 처음 지냈던 ‘천한 기생’의 신분은 이후의 식되지 않는다.¹³⁾ 춘향전 안의 사회적 갈등의 핵심은 신분 등 다른 것이 아니라 春香이 대표하는 民 일반 대 국가 권력 즉 불법적 관권 사이의 대립이다.¹⁴⁾

기타 야담·소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양반과 평민, 평민과 천민 사이의 신분갈등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신분 차별이 너무 엄격하여 형상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조선후기는 『춘향전』에서와 같이 기생 또는 기생의 신분에 준하는 인물이 자기 고을 수령에 대항해 목숨을 걸고 벌이는 투쟁이 문학작품으로 서술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양반과 상민의 갈등과 대립이 일상적이었고 또 문학 작품의 작자층이나 독자층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분 차별의 현실에 짓눌려 그러한 의식이 표출조차 되지 못한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¹⁵⁾ 반면에

12) “어느 뉘가 무죄한 날 죽을 지경 되게 했나 / 지금의 벼슬아치 욕심 많고 비루하오 / 백성들은 모두다 살가죽이 벗겨지고 / 염치도 전혀 없어 보케마져 앓아 갔소 / 장당의 후신인지 어거지 쉰 놈들은 / 단련 받은 규모는 화로의 쇠마치요 / 옥사를 처리할 땐 인정이 전혀 없고 / 잔인한 그 심보는 승냥이와 같았다고 / 슬그머니 유부녀에 욕심을 내어서는 / 백일같은 위력으로 간악하게 굴었다오”(柳振漢 지음, 김석배 역주, 1992, 338).

13) 뒷 시기 20세기 초에 완성된 『열녀춘향수절가』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춘향의 죄목은 수령을 조롱하고 거역한 것(操弄官長, 拒逆官長)이며 그에 대한 춘향의 항거가 소설의 중심 사건이다. 제도적으로 춘향의 신분은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14) 『춘향전』에 신분갈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춘향전』의 신분문제는 당대의 시대적·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다. ① 춘향의 신분이 제도적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상승하였고 ② 신분은 등장 인물들의 개인적 문제로 제기되고 해결되었다. ③ 법 또는 제도가 신분 갈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④ 주인공이나 민의 저항이나 집단적 대립에 핵심 주제로 부상되지 않았다.

『춘향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갈등에서 국가 권력과 민의 관계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였다.¹⁶⁾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민의 인식의 중심에는 정치, 특히 국가 · 관권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3. 19세기 민과 국가권력의 대립

위와 같은 상황은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 속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1812년 홍경래난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평민들이 전면적인 저항을 감행한 것이었다. 형식과 실제 활동에서 최고 지도자였던 홍경래의 신분은 평민이었다.¹⁷⁾ 특히 그 반란의 지도부는 하층민 출신의 지식인이 중심을 이룬 상태에서 지방의 엘리트, 대상인, 중간계층, 무력을 기반으로 한 장사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과 계층이 참여했다. 게다가 당시 상황을 전해주는 자료가 매우 풍부한 데도 반란을 수행한 수많은 인물들 사이에서 신분 갈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홍경래난은 종교적 성격이 강하지 않았다. 그 반란에 鄭眞인이 도래하여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신비주의적 측면이 있으나, 중국의 白蓮教亂이나 天理教亂에 비교해보면 그것은 종교적 신앙 수준에 도달하거나 반란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홍경래난의 성격은 평민이 중심이 되어 국가권력에 대해 직접 도전하였다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¹⁸⁾ 한편 봉기군은 華夷論을 반란의 현장에서 전복하고 있었다. 화

15) 박지원의 『兩班傳』에 양반과 평민의 격차와 갈등이 생생하게 형상화되었지만, 그것은 매우 예외적 작품이었다. 양반 계층을 통렬히 비판하고 그 개혁을 주장한 박지원은 인식은 매우 선구적인 것이었지만 야담과 소설의 작자층 · 향유층 사이에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16) 이상 내용은 오수창(2009) 참조.

17) “十二月十八日 嘉山 · 郭山等地 盜起 其魁洪景來者 龍岡常漢也”(『守窩集』권3 「滄桑日記」). 같은 책에 실려 있는 백경해의 家狀에도 동일한 서술이 있다. 이상 오수창(2005, 129~130) 참조.

18) 선행연구들은 중간계층, 또는 그들의 수령권 장악이 반란의 중심 목적이었다고 설명한 경우가 많다. 수령에 해당하는 유진장을 토착 지배층 인물들이 많이 차지하였지만 그들은 대개 최고지휘부에 의해 임명받고 권력을 양여받은 존재들이었으며 최고지휘부는 군현의 수령권에 관심이 없었다(오수창 2002, 306~311).

이론은 당시 지배 계층의 세계관의 중심을 이루는 관념으로 그 극복은 중세 이념의 탈피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진사 김창시가 작성한 檄文에는 鄭眞人이 ‘皇明之世臣遺孫 鐵騎十萬’을 거느리고 조선을 새 세상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흥경태난의 주체가 화이론의 틀에 갇혀 있었다고 설명된 적도 있다(정창렬 1984). 하지만 당시 지배체제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던 진사 김창시가 작성한 봉기군의 격문은 봉기군의 실제 이념을 지배층의 관념으로 왜곡한 것이었다. 반란의 현장에서는 격문에 담긴 ‘황명의 세신유손’과는 정반대 개념의 ‘胡兵’이 구원자로 선전되었다. 조선후기 지배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화이론이 반란의 현장에서 논리가 아닌 실천으로 폐기되었던 것이다(오수창 2002, 284~285). 그리고 핵심 지휘자들은 항상 전국 규모의 반란을 기획하고 논의하였다.

1862년 농민항쟁의 경우 항쟁의 양상과 의미에 흥경태난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나 民이 국가권력에 맞서 대결했다는 점은 공통적이었다. 그 해의 항쟁을 대표하는 진주 농민항쟁의 지도부 역시 매우 통합적이었다. 殘班 또는 樵軍 지도자가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유력 士族과 토호층, 일부 요호부민층을 제외하고는 참여 폭이 매우 넓었던 것이다(송찬섭 2003, 55). 민의 주장의 요체는 조세수취제도의 모순과 탐관오리들의 횡포와 수령에 대한 반대였고 토지개혁과 관련된 요구는 전혀 없었다(배항섭 2008, 486~467). 하지만 民이 관민 관계의 불법을 발언하여 방백과 수령의 탐학을 王法과 王民이라는 차원에서 단죄하고자 했으며 법에 의거한 권리와 의무를 내세우고 조세 개혁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1862년 농민항쟁에 대해 이전까지 주로 사회사적으로 접근하던 것과 달리 정치사의 맥락에서 그 항쟁을 조명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연구에서는 1862년 농민항쟁이 지방 사회는 물론이고 중앙 정계를 포함한 사회의 계층을 ‘저항의 정치’ 속으로 끌어들이며 정치적 움직임을 촉발하였고 19세기 후반의 정치상황은 사회 제성원이 1862년 농민저항의 정치를 경험하였다는 점을 전제하고 설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김선정 2006, 88).

V. 맺음말

조선후기의 정치사상은 핵심 정치주체의 변천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17세기에는 관인을 중심으로 한 사족들이 봉당으로 결집하여 정치적 경쟁을 벌이던 봉당정치가 그 시기 정치의 특징을 이루고 있었으며, 19세기에는 민 일반이 국가 권력과 직접 대면하는 상황이 그 시기 정치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18세기 탕평정치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는 외척 권세가의 의해 주도된 세도정치와의 전후관계 속에서 규정될 것이 아니다. 19세기에는 지배층에 의한 중앙 정치가 그 시기 국가 운영의 정치의 핵심을 이룰 만한 능동적인 논리와 역량을 이미 상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8세기의 탕평정치는 위로는 17세기의 봉당정치에 연결하여, 아래로는 19세기에 민 일반이 국가 권력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시대 상황과의 연관 위에서 설명되어야만 한다.

조선중·후기의 봉당정치론이나 탕평정치론은 그 시대를 이끌어간 논리였음에 틀림없지만 결국 자기 기반인 조선시대의 근본적인 정치 논리와 충돌하게 되었다. 17세기에 봉당정치를 수행하던 정치 집단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대립과 경쟁이 격화되는 속에서, 사상이 이익은 정치가 명분이나 시비보다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에 입각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정치적 경쟁을 인정하고 그 규칙을 창안하거나 조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인원을 줄이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방안은 현실적으로 수행될 수가 없었고, 그것은 사족 관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정치 논리가 벽에 부딪쳐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18세기의 정치는 절대적 군주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려 하였으나, 당시 체제의 핵심에 자리 잡은 군주가 체제 변혁의 활로를 찾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탕평정치는 여러 방향으로 정치 논리를 발전시키고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당시의 군주론은 절대 권력을 추

구함으로써 군신 공동의 기준에 따라 정치를 운영하게 되어 있었던 조선왕조 정치 사상의 성과를 부정하였고 결국 현실 정치를 운영해 나갈 역량마저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지배층 정치 논리가 내적으로 파열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위와 같이 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 들어가면서 조선의 정치사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했다. 민 일반과 국가 권력의 직접 대면이라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었다. 평민들의 저항의식이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으로 표출되고 있었음은 『춘향전』과 같은 소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1812년의 홍경래난이나 1862년의 농민항쟁과 같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평민들의 항쟁이 결국 조선 지배체제의 폭력적 붕괴를 통해서 새 시대를 개척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새로운 정치논리를 도출할 수 있었는지 우리 역사가 실제로 걸어가보지 못한 길을 쉽게 상정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민 등 사회 구성원 절대 다수가 주체가 되는 정치를 건설하는 것은 19세기의 절대적인 시대적 과제였고 당시 정치사가 그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만은 명백히 확인이 된다.

(투고일 : 2012. 1. 30 심사시작일 : 2012. 2. 5 심사종료일 : 2012. 3. 3)

주제어 : 붕당정치, 탕평정치, 세도정치, 국왕, 정치사상

Keywords : Factional Politics, Politics of Impartiality, Politics by In-Powers, King, Political Thoughts

[참고문헌]

- 김문식 2007, 『정조의 제왕학』, 서울, 태학사.
- 김백철 2010,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태학사.
- _____ 2011a, 「탕평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上, 태학사.
- _____ 2011b, 「영조대 '민국' 논의와 변화된 왕정상」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上, 태학사.
- 김선경 2006, 「19세기 농민저항의 정치: 1862년 농민항쟁, 官民 관계 위기와 법 담론」 『역사연구』 16, 역사학연구소.
- 김성윤 1997,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 김용흠 2006, 「19세기 전반 勢道政治의 형성과 政治運營」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 김인걸 2011, 「정조의 '국체' 인식」 『정조와 정조시대』, 서울대 출판문화원.
- _____ 2002, 「조선후기 여론과 정치」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 김준석 1997, 「18세기 탕평론의 전개와 왕권」 『동양 삼국의 왕권과 관료제』, 국학자료원.
- _____ 2005, 『韓國 中世 儒敎政治思想史論 II』, 지식산업사.
- 金勳植 1997, 「麗末鮮初 儒佛交替와 朱子學의 定着-社會倫理의 變化를 중심으로-」 『韓國 古代 · 中世의 支配體制와 農民』, 一潮閣.
- 박광용 1998,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 박현모 2001,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 배향섭 2008, 「조선후기의 민중운동」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지식산업사.
- 백민정 2010, 「정조의 사대부 인식과 정치철학적 입장 연구」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학회.
- 송찬섭 2003, 「1862년 농민항쟁과 진주」 『진주 농민운동의 역사적 조명』, 역사비평사.
- 유봉학 1996, 『꿈의 문화 유산, 화성-정조대 역사 · 문화 재조명』, 신구문화사.
- 오수창 1982, 「조선조 '당쟁'의 정치이론에 대한 논평」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1985, 「인조대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사론』 13, 서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_____ 1991, 「제도정치를 다시 본다」 『역사비평』 12, 역사비평사.
- _____ 1998, 「붕당정치의 성립」 『한국사』 30,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2,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 _____ 2009, 「조선후기 야담과 소설에 담긴 사회적 갈등과 신분인식」 『시대와 인물, 그리고 사회의

- 식』, 서울, 태학사.
- 柳振漢 지음, 김석배 역주, 1992, 「晩華本 春香歌」 『판소리연구』 3, 판소리학회.
- 윤정 2007, 「正祖의 『大學類義』 편찬과 『聖學輯要』」 『남명학연구』 23, 남명학연구소.
- ____ 2005, 「정조대 단종 사적 정비와 '君臣分義'의 확립」 『한국문화』 3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이경구 2004, 「1740년(영조 16) 이후 영조의 정치 운영」 『역사와 현실』 53, 한국역사연구회.
- 이태진 1977, 「중앙오군영제의 성립과정」 『한국군제사 근세조선후기편』, 육군본부.
- ____ 1993, 「正祖 -儒學的 계몽 절대군주-」 『한국사시민강좌』 13, 서울, 일조각.
- ____ 1992, 「正祖의 <大學> 탐구와 새로운 君主論」 『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作送의 배경」
『李晦齋의 사상과 그 세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____ 2011, 「조선후기 '민본' 의식의 변천과 18세기 '민국' 이념의 대두」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上, 태학사.
- 이태진 김백철 엮음 2011,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上, 태학사.
- 임형택 1987, 「조선후기 민중문화의 형성과 그 사상」 『한국의 사회사상』, 한길사.
- 鄭萬祚 1992, 「朝鮮時代 朋黨論의 展開와 그 性格」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鄭奭鍾 1983, 「朝鮮後期 社會勢力의 動向과 政變: 肅宗年間の 甲戌換局과 中人・商人・武人の 政變參與를 中心으로」 『韓國史學』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창렬 1984, 「조선후기 농민봉기의 정치의식」 『한국인의 생활의식과 민중예술』, 서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최성환 2009,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상권 2011, 「정조의 군주론과 왕정」 『정조와 정조시대』, 서울대 출판문화원.
-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 정치사 연구반 1990, 『조선정치사 1800-1863』 하, 청년사.
- 프레데리크 들뤼슈 편, 윤승준 역, 1995, 『새 유럽의 역사』, 까치.

[Abstract]

18th Century's Political Thoughts of Joseon Dynasty seen in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Before and After

Oh, Soo-Chang
(Seoul National Univ.)

The 17th century of the Jeseon Dynasty saw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tics by multiple political factions. Despite its political accomplishments, the factional politics came to an end by the end of the century with the severe struggles and conflict between rival political parties. A scholar named I Ik recognized the nature of the conflict among political factions. But he failed to initiate a new order that could successfully deal with the political competitions and struggles, and rather turned back to the old idea of reducing the number of people qualified to participate in politics.

Kings in the 18th century such as Yeongjo and Jeongjo tried to utilize Politics of Impartiality, the main idea of which was the king to be a unique and absolute ruler. Although they achieved much in many areas of state governance, their policy denied the traditional political idea that kings and their subjects had to obey common principles in governing the state. In addition, Politics of Impartiality could not be succeeded by later kings because it could be successfully executed only by heroic kings of super talent.

The following main issue in the politics was the confrontation between people and the state. Such conflict were reflected in novels like Chunhyangjeon and in the rebellions and uprisings led by commoners in the 19th century. The Politics by In-Powers at the time was a supplementary phenomenon compared to the confrontation between people and the state.